

벨 한미연합사령관 회견 전작권 이양시기 논란

벨 사령관 “내년 상반기 결정” vs “물리적 불가능” 軍 당국

버벨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이 30일 한미안보협의회(SCM)에서 논의된 현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면서 일부 사안에서는 또 다른 논란을 예고했다.



30일 서울 용산미군기지 내 연합사 대회의실에서 열린 버벨 벨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 내외신 기자회견담회에서 벨 사령관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안보상황 평가해 결정 바람직”

△내년 상반기까지 전작권 전환시기 결정 =SCM에서 2007년 상반기까지 미래 지휘관 로드를 이행하는 일정을 마련키로 합의한 것과 관련, 벨 사령관은 “이 때까지 전작권 전환에 관한 정확한 시기가 결정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SCM에서 2009년 10월 15일부터 2012년 3월 15일까지 전작권 전환을 완료하기로 합의했지만 미래 지휘관 로드를 짜는 내년 상반기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벨 사령관의 이런 주장은 내년부터 매년 안보상황을 평가해 전환시기를 결정해야 한다는 우리 군 당국의 입장과 상반된 것이다.

군당국은 지휘관 로드를 이행 위한 ‘한미 군사구조 이행추진단’을 연내에 발족해 내년 상반기까지 지휘관 로드를 전환할 수 있다는 계획이며 이 기간 내에 전작권 전환시기를 결정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확장억제는 핵우산 =벨 사령관은 SCM

공동성명에 처음 명기된 ‘확장억제’(extended deterrence)라는 개념은 ‘핵우산’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그는 “확장된 억제력은 군사조직의 패기가 아니며 미국의 핵우산 공약에 대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도 아니다”면서 “확장된 억제력은 핵우산으로 1978년 이후 모든 SCM

공동성명에 명시되어 왔다”고 설명했다. 확장억제 개념과 동일한 핵우산 표현을 1978년 SCM 공동성명에 명기한 이후 매년 사용해왔기 때문에 새로운 내용이 아니라는 설명으로 이해되고 있다.

‘확장억제’ 개념도 입장차 재확인

그러나 합참과 국방부 관계자들은 그동안 확장억제 개념은 핵우산을 보다 구체화한 표현이라고 설명했다. 합참 관계자는 “확장억제는 핵우산과 개념은 같지만 핵우산은 정치·외교 수준의 용어”라며 “확장억제는 군사·전략적으로 구현된 개념이다. 한 단계 구체화해서 표현된 것”이라고 말했다.

△MC 전략지시 실체는 무엇 =벨 사령관은 ‘MC에서 핵과 관련한 전략지시를 받았느냐’는 질문에 “MCM(군사위원회 회의)에서 작전계획과 관련한 어떠한 지침도 받지 않았다”고 말했다.

합참 관계자는 이와 관련, “MCM에서 핵을 핵으로 보복하는 계획, 핵우산 보장을 시행하거나 핵우산 보장을 구체화하는 것을 작전계획과 연관해 논의한 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게임비리’ 수사 정치권 정조준

檢, 박형준의원 前 보좌관 영장

사행성 게임비리를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은 30일 한나라당 박형준 의원의 전 보좌관 정조준 씨에 대해 게임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알선수재)로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정치권 인사가 사행성 게임 비리에 연루돼 사법처리되기는 정씨가 처음으로 게임비리 수사가 정치권 전반으로 본격화하는 양상이다. 검찰은 정씨 외에 다른 문관위 소속 의원 보좌관들도 게임업체 또는 상품권 업체들로부터 로비 대가로 돈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이에 따라 게임·상품권 업체와 국회의원 보좌관, 그리고 국회의원으로 연결되는 로비실이 사실상 드러날 경우 정치권에 큰 파문이 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해 4~5월 사행성 게임 ‘마도라’의 영상물등급위원회 심의 통과에 영향력을 행사

해주기로 하고 업체로부터 5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영등위를 직접 찾아가거나 전화로 이용해 게임의 심의 통과를 부탁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법으로 허용된 한도 내에서 부탁했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정씨는 상품권 업체 해피메이니아에서로부터 500만원의 상품권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게임업체나 상품권 업체들이 국회 의원들의 영향력을 기대하고 보좌관들에게 돈을 준 것으로 보고 보좌관들의 돈이 의원들에게 흘러들어갔는지도 조사 중이다.

한편 검찰은 아케이드 게임 관련 협회의 지원을 받아 지난해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열린 게임 박람회에 다녀온 한 여당 의원 보좌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한 결과 미국 방문이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워 무혐의로 결론 낼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

“김용갑 망언” 어물쩍 넘기지 않겠다

한나라 윤리위원장... 김용갑의원 흠피 사과문 게재

한나라당 인명진 윤리위원장은 30일 같은 당 김용갑 의원의 ‘광주 해방구 발언’과 관련, “어물쩍 넘여가지 않겠다”면서 강도 높게 비판했다.

인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 프로그램 ‘안녕하십니까 이몽룡입니다’에 출연, 김 의원이

지난 26일 국회 통일통일 국감에서 “6.15 민족대축전 당시 광주는 해방구였다”고 언급한 데 대해 “이번 일로 상처를 입은 호남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조처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본인이 오해라고 하지만 오해할 사람이 생기는 발언을 하는 것은 공인으로 적절치

않다”면서 “한나라당은 광주와 광주시민에게 맞고 있는 정당으로 진심으로 사과하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그는 “(한나라당 인사들의) 잇단 색깔론 발언에 대해 당사자들이 책임지고 그만 돌 일인지 당 전체가 책임질 일인지 많이 걱정하고 있다”면서 “한나라당에 문제가 있는 일이라면 당 전체가 국민에게 사죄한다는 의식이 전달될 수 있는 징계방법을 연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인 위원장은 이어 지난 10.25 제.보선에서 김 의원이 한나라당 후보가 아닌 무소속 후보를 지지한 것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해 해당(害黨) 행위가 드러나면 엄중하게 처벌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김용갑 의원은 이날 ‘광주 해방구 발언’과 관련,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사과문을 통해 “광주시민의 명예를 훼손하고 자존심을 상하게 할 오해의 소지가 있었다는 것을 인정하고 광주시민들에게 진심으로 사과한다”고 밝혔다. 그는 “광주 해방구라는 발언은 광주시민이나 광주지역을 말한 것이 아니라 ‘6.15 민족통일대축전’ 행사를 지칭한 것”으로 “행사에 참석한 한총련, 범민련 등의 단체가 반미구호와 현수막을 붙이는 등 광주를 혼란에 빠뜨리고 국가정체성을 훼손한 것에 대한 비판”이라고 해명했다. /연합뉴스

“불법 대부광고 기승

이자제한법 개정을

민노당 고송자 의원

민중노동당 소속 고송자 전남도의원은 30일 “광주·전남에서 미등록 대부업체와 사채업자들이 불법 전단지 및 명함형 광고를 이용, 고금리 대출 행위를 일삼고 있으나 금융감독 당국과 지자체의 단속의 손길이 미치지 않고 있다”며 이자제한법 개정을 촉구했다.

고 의원에 따르면 당 경제민주화은

동분부 및 전남도당과 함께 지난 11일부터 사흘동안 목포와 여수, 구례지역 주요 상가를 방문해 대부광고 전단지 13종을 수거, 분석한 결과 100%가 업체명과 주소, 이자율, 연체이자율 등을 누락시킨 불법 광고였다.

고 의원은 “대부업체의 불법·부당 광고가 관치는 것은 행정당국이 감사·감독을 소홀히 해왔기 때문”이라며 “특히 합법 광고라 해도 최고 연 66%까지 고리대를 취하는 업체가 대부분이라는 점에서 서민 금융 이용자 보호를 위한 정부의 노력이 절실하다”고 지적했다. /정후식기자 who@kwangju.co.kr

Real estate and financial advertisements including '분실' (Lost), '자본감소 및 구주권제출공고' (Capital reduction and share certificate cancellation), '공시최고' (Public notice), and '건물매매' (Building sale).

국내 최고의 HRD 부문의 전문가를 초빙하여 “기업내 인적자원 체계 구축 방안과 인재육성 능력향상 방안”을 제시!!!

노동부 초청-한국 중소기업 경영자 및 교육 관계자 무료 연수 프로그램

최근 치열한 국제 경쟁의 시장에서 급속히 변화하는 지식정보화 시대와 관련하여 점차 기업 내 성과 창출과 발전을 위한 기업 인적 자원의 능력개발 및 향상 부문에서 그 중요성은 날로 더해 가고 있습니다. 노동부에서는 한국 중소기업의 CEO 및 임원과 기업 HR(기업교육, 인재개발)담당자의 핵심 능력 향상을 지원하기 위하여, 본 한국능률협회를 “중소기업 CEO 및 교육(HRD)연수기관”으로 지정하여, 국내·외 최고의 선도기업체 경영자와 유명한 석학 및 전문컨설턴트를 초빙하여,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을 만들기 위한 전략적 방안”을 함께 모색해 보고자 합니다.

본 연수는 노동부 초청 무료지원 세미나이며, 중소기업의 경영자 및 교육담당자의 공동 참가 신청시 최우선으로 초청합니다

Table with columns for '교육 일정' (Education Schedule) and '기타 지역 일정 안내' (Other regional schedule information). It lists dates, times, and topics for various seminars.

문의 및 신청: 한국능률협회 중소기업 경영자 및 교육관계자 연수 지부사무국, 호남지부: 김하영 지부장, 최용기 대리/Tel. 063-278-4450

본 과정은 ‘중소기업 핵심직무능력향상 지원사업’의 수강 여부와는 상관없이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